

광주 부동산 거래 1위 'S-클래스 더 제니스'

상반기 209건...1500만원대 합리적 분양가·2240세대 대단지 등 장점
2위 '그랜드 센트럴' 신축 메리트에 수요 꾸준...3위는 신창부영3차

올 상반기 광주에서 가장 거래가 많았던 아파트 단지는 'S-클래스 더 제니스' (광주시 북구 입동·사진)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 상반기 인기가 많은 아파트 단지의 특징은 비교적 합리적인 매매가(분양가)와 '초품아' (초등학교 교를 품은 아파트) 등 우수한 학군, 대단지, 우수한 직주접근성 등이었다. 무엇보다 최근 고금리로 대출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저금리 금융상품 이용이 수월한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의 선택지가 상위권에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부동산 전문 앱 '아실'에 따르면 올 1-6월 광주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아파트 단지는 209건이 거래된 'S-클래스 더 제니스'였다. 올 상반기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는 광주 세번째 규모의 대단지(2240세대)가 큰 장점으로 꼽힌다. 지난 2020년 분양 당시만 하더라도 광주지역

최초로 84㎡형 기준 5억원(평당 약 1500만원)을 넘어서면서 논란이 됐지만, 최근 광주지역 평균 분양가가 2000만원을 넘어선 게 이 단지에는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최근 입주를 시작한 신축인 만큼, 즉시 입주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 인근의 전방·일신방직 개발 호재도 투자자들의 매입도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2위를 기록한 단지는 '그랜드 센트럴' (동구 계림동)이었다. 그랜드 센트럴은 162건이 거래됐는데, 마찬가지로 2336세대의 대단지로 광주 2위 규모다. 이 단지는 신축에 속하는 준공 4년 차 단지로, 입주 시 집수리가 불필요하고 관리비가 저렴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이 단지는 실거주자 만족도가 높는데, 2년 전 최고 거래금액 대비 1억원 넘게 매매가가 줄면서 입소문을 타고 꾸준한 거래가 성사된다는 게 공인중개사의 설명이다.



3번째로 많은 거래량을 기록한 단지는 76건을 기록한 신창부영사랑으로3차(광산구 신창동)이었다. 이 단지는 지난 2006년 입주를 시작한 구축이

지만 1792세대의 대단지로 특히나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단지에서 초등학교와 중·고교 모두 500m 이내에 위치해 있고 학원가

도 도보로 오가는 게 가능하다. 또 26평형임에도 방 3개와 화장실 2개를 갖춘 구조도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이유로 보인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상무역(서구 마북동)은 67건으로 4위였다. 이 단지는 373세대로 적은 규모지만 평당 1500만원인 분양가가 당장 입주자 필요한 신축 선호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북구 신용동 '한양수자인리뷰'는 58건으로 네 번째로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지난 2010년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는 15년 차 단지임에도 교통여건이 거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순환도로를 통해 관공서와 금융기관이 밀집한 상무지구 이동이 편리하고 빛고을대로 진입도 수월하다. 또 초·중·고 모두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전체 1254세대 중 925세대가 25평형으로 신혼부부들의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신혼부부를 제외하고는 최근 금리가 높아 쉽사리 움직이려는 소비자가 많지 않다"며 "결국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단지를 비롯해 '가성비' 높은 단지들의 인기는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2월부터 숙박가능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생활 인구 증가 기대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쉼터를 도입해 생활 인구를 늘려 농촌 소멸을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도심에 집이 있고 시골에 땅이 있는 부유층이 지역 소멸의 위기를 해결할 '구원투수'라는 해석으로 받아들여질만해 비판이 나온다.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 10만원과 연 1만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10평) 이내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규모는 농막(20㎡ 이내)의 1.7배이고,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 가설 건축물인 만큼 안전성을 고려하면 1층짜리 형태가 적합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내구(사용 가능) 연한을 고려해 쉼터를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쉼터는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이곳에서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거주 시설임을 고려해 재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주변 영농 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설치 요건도 설정했다. 우선 법으로 지정된 방제 지구와 붕괴 위험 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

기준 적용 지역에서는 쉼터 설치를 제한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통해 쉼터 설치 제한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농업인은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만 쉼터를 지을 수 있지만, 농지를 빌려 쓰고 있는 농업인의 경우 농지 소유주에게 사용 승낙을 받은 뒤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전기·수도 연결은 쉼터 설치 전 지방자치단체 확인이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농막도 입지와 시설 기준을 갖추면 3년 이내 유예 기간을 두고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농막은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법적으로 숙박이 금지돼 있다. 현재 농막은 전국에 23만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농식품부는 농막을 농지 대장에 등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주TP, 스마트공장 보급 활성화 간담회

지역 공급기업 육성 논의

광주테크노파크(이하 광주TP)가 지난 31일 본부동 2층 회의실에서 광주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2층 회의실에서 광주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추진 계획과 현재 광주지역에서 스마트공장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공급기업 중심으로 보급·확산과 구축 완료 후 도입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지역 공급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논의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최근 2023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수행한 19개 테크노파크 대상으로 실시한 성과평가에서 우수등급인 A등급을 2년 연속 획득한 바 있다. 특히 올해 광주시와 삼성전자 자회사는 '지자체 연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삼성형(대중소상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광주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의 스마트제조 혁신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9월중으로 지역 내 도입·공급 기업 육성을 위해 대학 및 유관기관과 협력, 기업에서 근무중인 재직자 실무위주 역량강화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기업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잘 수렴해 향후 광주지역 제조기업들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내년 사업에 기초, 고도화 지원, 지원금 확대, 자부담 완화, 지역 DX멘토단 지원, 스마트공장 전문가 인력양성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정부, 깜깜이 계란값 조사 추진에 산란계협회 "시장 왜곡" 반발

농식품부, 가격 고시 방식 개선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산지 계란값을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생산자단체가 "시장 질서를 왜곡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산란계협회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정보 제공을 막고 시장에 직접 개입해 계란 가격을 조정·발표하겠다고 했

다"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격 통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입맛대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지지만을 수는 있지만, 현재 연간 수익률이 0.4%에 불과한 농가와 관련 산업을 붕괴시키고, '100% 자급'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남 농식품부는 공공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

이 계란 산지 거래 가격을 직접 조사해 발표하도록 가격 고시 방식을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계란 산지 가격은 지난 1960년대부터 생산자단체가 고시해 왔는데, 이 방식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생산자단체가 고시하는 산지 가격은 거래 희망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 가격을 파악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연합뉴스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